

2026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시민참여연구회

대표의원 : 유 승 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

1. 연구 활동 결과

(대표의원 : 유 승 분)

2026. 05.



인천광역시의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I 연구배경 및 목적

□ SDGs가 요구하는 시민참여의 중요성

- UN SDGs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SDG 11·16·17은 지방정부 차원의 참여·협치체계 강화를 강조함.
- 2024년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을 SDGs 기준에서 사전 검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시민참여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인천시 시민참여 구조의 재점검 필요

- 인천시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제시된 시민참여 관련 지표는 여러 부문에 분산되어 있으며, 참여 방식, 참여성과, 환류체계 등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부족함.
-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 플랫폼, 공론장 운영 등 다양한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접근성·제도 간 연계성·정책 반영 과정에서의 환류 부족 등 구조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국내외 SDGs 기반 참여 모델의 시사점 확인 필요

- 국내·외 SDGs 기반 시민참여 사례는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참여구조 설계와 정책 환류 체계 구축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함.
- 따라서 인천시의 시민참여 현황을 SDGs 관점에서 정밀하게 진단하고, 국제·국내 사례를 토대로 개선 방향과 인천형 참여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II 연구회 개요

- 연구주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
- 연구기간 : 2026. 1. 1. ~ 5. 28.
- 구성의원 : 유승분 대표의원
신영희 의원, 김대영 의원, 장성숙 의원
-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참여의원 : 유승분 대표의원
신영희 의원, 김대영 의원, 장성숙 의원
- 연구활동내용
 - 1차 / 1월 30일 : 출범식(발대식), 학습간담회 개최
 - 2차 / 3월 18일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간담 및 토론)
 - 3차 / 4월 14일 : 정책연구용역 FGI
 - 4차 / 5월 6일 :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간담 및 토론)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용역명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연구
(인천광역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 용역기간 : 2026. 3. 11. ~ 6. 8.
 - 용역비 : 8,639,000원
 - 수행기관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주요내용
 - 의회 내 SDGs 추진 체계 및 역량 강화 제시
 - 특별위원회 설치: 인천시의회 내에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 전담 인력 배치: 전담 전문위원을 배치하여 상설 추진체계구축
 - 상설 교육과정 신설: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상설 교육과정 마련

- 의정 활동 지원 인프라 및 기능 확대
 - 의정활동 포털 운영: 의회 홈페이지 내에 인천SDGs 의정활동 포털 구축 운영
 - 4대 기능별 과제 도입: 입법, 예산, 감시, 협치 등 의회 핵심 기능별 실행 과제 도입
- 입법 과제 (3대 조례 정비 방향)
 - 의회 운영 및 의사규칙: 인천시의회 운영 조례와 의사규칙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취약계층의 위원 구성을 명시하고,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협의회의 책무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중장기 실행 로드맵 : 2030년까지 적용 가능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 제안

III 세부 연구활동내용

- 제1차 출범식(발대식), 학습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6. 1. 30.(금) 14:00~17:0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등
 - 참 석 : 유승분 대표의원, 신영희 의원, 장성숙 의원,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정책지원관 등 7명
 - 발 제 자 :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
 - SDGs 기반 시민참여 지표 정비 및 인천시 현황 진단
 - 지방의회 차원의 SDGs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분석 역할 검토
 - 인천형 시민참여 모델 정립 및 향후 정책 연구 방향 설정

- 관련사진



홍보전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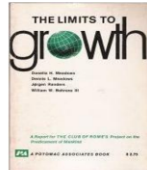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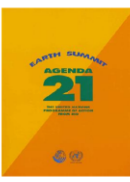
의회 1층 전광판 홍보



현수막 시안



- 발표자료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참여연구회 세미나_2026.5.30(금) 14:00~17: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윤경호 (서해안 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dyoonho@gmail.com)	 인천광역시 키워드 AI 생성 이미지
2021 인천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 여업활동구역 약 40% • 군사활동구역 약 33% • 항만/항만/항만 구역 약 11% • 연구교육보존구역 약 10% • 해양보존구역 약 6% 어업 가치 • 전국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농산물과 수산물 해양생태 가치 ① 해양보호생물인 청바리목의 어종 다양성 ② 전국 연안습지 면적의 30%(729ha)를 차지 ③ 동진 장봉도-송도 습지보호지역 ④ 대안제도 해양보호구역 ⑤ 강화도에 반사지 문화유산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참여연구회 세미나_2026.5.30(금) 14:00~17: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참여연구회 세미나_2026.5.30(금) 14:00~17: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글 순서 1.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의미 2. 지속가능발전목표 글로벌 이행 현황과 Post 2030 국제협력 전망 3. 한국 지속가능발전 역사와 시사점 4. 한국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과 과제 5.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성 현황과 시사점 6.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참여연구회 세미나_2026.5.30(금) 14:00~17: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의미 ✓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역사적 흐름 ✓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SDGs) ✓ 1992 의제21 채택과 2015 SDGs 채택의 차이 ✓ 시사점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역사적 흐름  1962  1972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참여연구회 세미나_2026.5.30(금) 14:00~17: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역사적 흐름  우리 공동의 미래(1987) “빈곤과 환경 약화의 악순환은 기회와 자원의 낭비입니다. 특히 인적 자원의 낭비입니다. 빈곤, 불평등, 환경 파괴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즉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그로 할렘 브룬트랜드, 노르웨이 수상,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1987) 머리말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역사적 흐름  의제21(1992)  유엔 환경과 개발 회의(지구정상회의)(1992)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참여연구회 세미나_2026.5.30(금) 14:00~17: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역사적 흐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2)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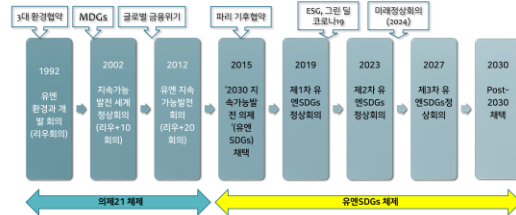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역사적 흐름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2015)

유엔 총회(2015)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역사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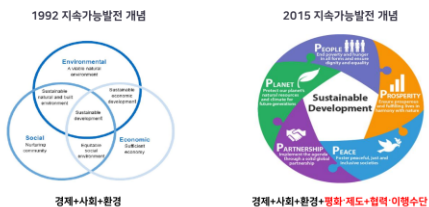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SDGs)

이해관계집단들의 정치적 합의 결과



- 17개 목표
- 169개 세부 목표
- 234개 지표

1992 의제21 체제와 2015 SDGs 체제의 차이



1992 의제21 체제와 2015 SDGs 체제의 차이

[illegible]

1992 의제21 체제와 2015 SDGs 체제의 차이



1992 의제21 체제와 2015 SDGs 체제의 차이

여성	아동/청소년	NGO	농민	원주민
지방정부	과학기술계	노동자/노조	기업/산업계	탈애연
노인	교육 및 학계	자원봉사자	LGBTQI	유엔SDGs 이해관계자그룹

1992 의제21 체제와 2015 SDGs 체제의 차이



원천자료: 원천시민참여연구회, 2005. 이영진, 지방자치제도 역행, 2002. 5. 90. (2) 54100-57100. 원천시민회, 원천자치제도개선사업, 1-14.

1992 의제21 체제와 2015 SDGs 체제의 차이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유엔 자발적국가보고서(VNR)

유엔 이해관계집단 참여

원천성인물 원천성인물정보제공 SDCS 인증번호 2025-1-10 (제) 14-00-07-00 원천성인물 정보제공자: 원천성인물 정보제공자: 원천성인물 정보제공자

전문 위원회 → 이사회(집행부)	정기적인 공문장 구축	체계적인 정보 공개 및 망 구축
국가차원 이행 강화 (VNR 등)	참여 주체의 확대 (국가 정부 + @)	참여 주체의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

구분	20세기 제1차대전	21세기 제2차대전 (자국측 관점)
정치	국가 정복 중심 - 패권국가(미국, 소련, 일본, 유럽연합)	국가 정복 + @ - 패권국가(미국,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인도, 중국) - 경제, 사회주의 등 C/P -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 이데올로기
경제	물적 성장 중심 - 자식(부동산)을 물려주기 - 대량 생산 소비	물적 성장 중심 - 자식(부동산)을 물려주기 - 정착 생산 소비
사회	절대적인 반목 회피 양상 행동 양상 회피 상대적 회피	상대적 반목 회피 상 행동 다양한 의사 보편 회피
환경	도시 위생 정책 - 도심 치안 중심	국가 및 국제 환경 정책 - 자연 치안 중심 - 경제·사회적 정책 일체(일괄)

- ✓ 유엔SDGS 글로벌 이행 현황
- ✓ 주요 국제협약 논의 동향
- ✓ POST 2030 전망

Figure 2-1: World GDP composition 2020

Figure 2-1 is a line chart showing the World GDP composition from 1960 to 2020. The Y-axis represents the percentage of GDP, ranging from 0% to 100% in 10% increments. The X-axis represents the year, from 1960 to 2020 in 10-year increments. The chart displays the percentage share of GDP for various economic sectors over time. The sectors are: Agriculture (blue line), Industry (red line), Services (green line), and Total (black line). The Services sector shows a significant upward trend, starting around 40% in 1960 and reaching nearly 70% by 2020. The Industry sector shows a steady increase from about 30% in 1960 to 35% in 2020. The Agriculture sector shows a steady decline from about 30% in 1960 to 25% in 2020. The Total GDP line is a dashed red line that remains relatively flat around 100%.

Figure 2-1: World GDP composition 2020

Figure 2-1 is a grid of 16 icons representing various economic sectors. The icons are arranged in a 4x4 grid. The sectors are: Agriculture (blue line), Industry (red line), Services (green line), and Total (black line). The icons are: 1. Agriculture (blue line), 2. Industry (red line), 3. Services (green line), 4. Total (black line), 5. Agriculture (blue line), 6. Industry (red line), 7. Services (green line), 8. Total (black line), 9. Agriculture (blue line), 10. Industry (red line), 11. Services (green line), 12. Total (black line), 13. Agriculture (blue line), 14. Industry (red line), 15. Services (green line), 16. Total (black line).

Figure 2-1: World GDP composition 2020

Figure 2-1 is a grid of 16 icons representing various economic sectors. The icons are arranged in a 4x4 grid. The sectors are: Agriculture (blue line), Industry (red line), Services (green line), and Total (black line). The icons are: 1. Agriculture (blue line), 2. Industry (red line), 3. Services (green line), 4. Total (black line), 5. Agriculture (blue line), 6. Industry (red line), 7. Services (green line), 8. Total (black line), 9. Agriculture (blue line), 10. Industry (red line), 11. Services (green line), 12. Total (black line), 13. Agriculture (blue line), 14. Industry (red line), 15. Services (green line), 16. Total (black line).

There are global differences in VNR reporting

Category	Value
402 VNRs have been presented by July 2019	402 VNRs
148 countries have presented at least one VNR	148 countries
<2.00 VNRs Global average per capita GDP at basic	<2.00 VNRs
Countries have reported GHG emissions in 2019	43
Countries have reported GHG emissions in 2019	95
Countries have reported GHG emissions in 2019	43
Countries have reported GHG emissions in 2019	10

[illegible]

✓ 기후 위험 구조화	기후변화(SDG 13)는 거의 모든 목표 달성을 제약하는 핵심 리스크 현재 SDGs를 제정·추진하는 데 있어 기후 변화가 가장 중요한 장애물 로
✓ 사회 불평등 해소	교육, 보건, 접근성에서 다양한 여성과 소인수 집단에 → 영향성(equity) 중심 SDGs 접근 필요 사회 안전망 강화 등 포용적 성장 전략 필요
✓ 재원조달 단계	외국인 직접투자(financing gap) 해소 필요 인정 2020년 10월 23일, 유엔총회 → SDGs를 위한 프래임(SDGs Finance Framework) 으로 전환(SDG, 임팩트 투자, ...)
✓ 다자주의	기후변화, 도시, 기후, 사회적 불평등, 식량, 생태계 도시-지역 단위 SDGs 성과 관리 및 정책 실행 중요
✓ 기업의 역할	SDGs와 CSR을 연결·공급망·공급망·SDGs를 관철하는 자비로운 SDG washing(SDGs washing)의 신 산업을 찾아 이에 대한 정책 대응 신사, 규제, 투자 기준 과의 연계 필요

1. 국제개발재원 세비어 선언 2025
 - 개발도상국에 연간 \$4조 규모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제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촉진**
 - 부채 및 개발 위기 대응
 - **국제 금융 체제 개혁**
2. 세비어 행동 플랫폼
 - **130개국이 출범**, 세계 각국 및 국내 자원 동원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및 민간 투자 확대에 초점**
 - 부채 문제 해결
 - 임팩트 개발 투자 촉진
 - 국가 및 글로벌 차원의 국제적 개혁 지원



구분	UN SDGs 접근 기준	지속가능발전목표별 구조
법적 성격		지속가능발전SDGs 국가 운영의 기본법칙 설정
목적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정책 목표 및 이행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적 정책 목표 설정과 이행 체계 구축
지속가능성 성격	정부·시민사회·민간의 파트너십 기반으로서	민·관 협력이 강조 자율 한 추진
최상위 조차기관	최고의급 정책적 차기 조차기관에 연계 가능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국조심)
중앙-지방 연대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필수	중앙-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연대
부처 간 통합	부처 간(비)소속, 정책 달성도 공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포함 및 조정(협의체) + 정부
참여 단계	시민·사회와의 접근, 단계별 접근 가능에 따라이행자	민간·학계·시민·사회·기업·단체(NGO) 등 + 정부
참여 주제	정책 수립·이행 통합 접근, 전 과정 참여	지속가능성 이해를 전제로 참여
참여 방식	시민·민간의 숙의토론, 공동행동	위원회 의결, 공청회, 시민·민간 열람
숙의의 형태	시민토론, 숙의형 공동 정책 개발 접근	위원의 숙의공론화 활동
공론화 체계	투명한 공론장, 숙의 과정의 정책적 접근	숙의공론화 운영 기본원칙 제시(선언서)
책무성 확보	참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응답 책임	지속가능발전심사결과를 반영한 정책 이행
성과 지표 설정	이행과정에 대한 정부 주관 SDGs 정책 재검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 공개 보고
이행 점검 방법	참여가 모니터링, 시민 참여 가능	정부 주관 감사 + 위원회의 비탄원(국조심) 활동
통합 평가	참여가 핵심인 포괄적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SDGs의 수준 제고되는 제척적

주요 국제협약 논의 동향

1. 생물다양성 보충기금 조성
> 합의기금(Coll. Fund) 조성 합의, **생물계 유전정보 활용 기업**의 **지분적 보유**로, 매출의 0.1% 또는 영업이익의 1%를 기여, 자산 2,000만 달러(약 280억원) 이상 & 연 매출 5,000만 달러(약 700억원) 이상 & 연간 이익 500만 달러(약 70억원) 이상 등 **3개 조건 충족 기업 대상(중소기업 외산)**, 국가별 입법조치 권고
> 생물다양성 보충기금: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으로 2030년까지 연간 2,000억 달러 조성 목표 합의 실패
2. 자연 관련 재무 공시 협의체(TNFD)
> 500개 이상 기업 및 금융기관이 자연 관련 공시 약속
> Nature Action 100: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의 자연 관련 영향 평가



주요 국제협약 논의 동향

2024년 4개 주요 유엔회의의 공통적 흐름

- ① "전환은 필요하나, 재원과 전환이 부족"
 - 모든 회의에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확인
 - 선언 ↔ 제정 ↔ 정치 의지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
- ② **다자주의의 한계와 재구성 시도**
 - 다자 협력: 운영 시스템을 개혁
 - 개발 계획: 국제금융체계 개편
 - 기후-생물다양성: **비국가 행위자** 확대(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참여-협력 체계 확대)
- ③ **SDGs의 재정의**
 - 개발 목표(SDGs) → **복합 위기 대응 프레임**
 - 기후-자연-불평등을 분리하지 않는 접근 강화

Post 2030 전망

목표 중심(goal-based) 체제 → 위기 대응·전환 관리 중심(regime-based) 체제

영역	SDGs(2015-2030)	Post-2030	목표 달성 →
발전 개념	성장+포용	회복력+한계 관리	위기 대응 능력(capacity)
기후	감축 목표	생존-적응-손실 관리	국가 특성의 종류 (기업, 시민사회)
자연	보전	자연-기반 해법(NbS)	참여의 제도화 (공정회 → 발행 책임)
경제	효율	전환 정의-안정	
거버넌스	국가 중심	다중-참여-속의	
시민	수혜자	공동 설계자	

Post 2030 전망

핵심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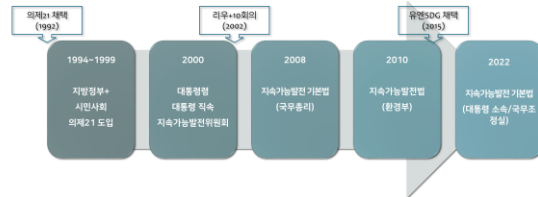
* 젯GPT 활용

복합 위기 · **회복력** · 전환 정의 · 한계 관리 · 기후 적응 · 손실과 피해 · **자연기반해법** · **AI 거버넌스** · 다자주의 개혁 · **시민 속의 미래세대** · **글로벌 공공재** · 중견국 외교 · 지역화 · 사회적 신뢰

한국 지속가능발전 역사와 시사점

- ✓ 한국 지속가능발전 역사
- ✓ 시사점

한국 지속가능발전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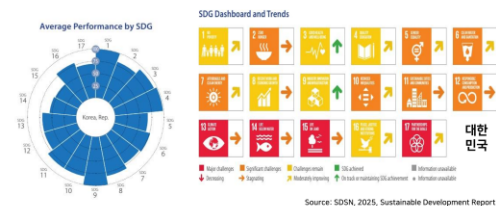
시사점

구분	박근혜 정권(2013-2017)	문재인 정권(2017-2022)	윤석열 정권(2022-2025)
거버넌스 성격	관료 기술 중심	참여형(이러닝)	행정 통제형
법제도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1)
담당부서	환경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위원회 기능-관련 구성원	대통령 소속 위원회, 실·과-자문	대통령 소속 위원회, 실·과-자문	대통령 소속 위원회, 실·과-자문
국가-지방 연계	선언적	선언적	형식적
이해관계자 참여	없음	없음	선언적
속의 공론장	없음	없음	임의적
평가 체계	2년 주기	2년 주기	2년 주기
환류 체계	없음	없음	속의공론장-의견수렴연장 결과공표 의무
국제협력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2016)	한정된 장관 연설(2018)	국제개발협력 중심
SDGs 이행 성적	31위(157개국)(2017) (SDG 5, 8, 13, 15 4위)	27위(163개국)(2022) (SDG 5, 10, 13, 14, 15, 17 4위)	34위(167개국)(2025) (SDG 13, 14, 15, 17 4위)

한국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과 과제

- ✓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국내 정치·경제·사회 동향과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제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구분	UN SDGs 접근 기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구조
법적 성격	-	지속가능발전SDGs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설정
목적	경제·사회·환경 통합 정책 조정 및 이행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적 정책 조정과 이행 체계 구축
거버넌스 성격	정부·시민사회·민간의 파트너십 거버넌스	민·관 협력 기반의 조창 자율형 거버넌스
최상위 조정기구	최고위원 정치체 조정기구(4차 PF 연계 가능 구조)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국조심)
중앙-지방 연계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필수	중앙-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연계
부처 간 통합	부처 간 협력 체계, 정책 일관성 확보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력 및 조정(책임관)
참여 주체	시민, 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학계 등 다중 이해관계자	민간위원(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 등) + 정부
참여 단계	정책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 참여	정책 수립·이행 단계 중심 참여
참여 방식	시민회의, 숙의토론, 공론화 등	위원회 심의, 공론화, 의견수렴 절차
숙의민주주의	시민토론, 숙의형 공론장 적극 활용 권고	의의적 속의공론장 운영
공론화 체계	투명한 공론장, 속의 결과의 정책 연계	속의공론장 운영 기본원칙 명시(선언적)
책무성 확보	참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응답 책임	위원회 심의·사공론 결과 반영 및 결과공표 의무
정보 접근성	대행위 공개, 시민 접근 가능한 SDGs 정보 제공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 이행 현황 공개·보고
이행 점검 및 평가	참여 기반 모니터링, 시민 평가 권고	정부 중심 평가 + 위원회 의견 반영(구속적 X)
종합 평가	참여·속의가 핵심인 포괄적 거버넌스	협력형 거버넌스이나 속의·공론 제도화는 제한적

○ 제2차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간담 및 토론) 개최

- 일 시 : 2026. 3. 18.(수) 16:00~19:1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등
- 참 석 : 유승분 대표의원, 김대영 의원, 윤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인천시 송태진 정책기획관 등 10명
-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 착수보고
- 관련사진



홍보전단지



의회 1층 전광판 홍보



현수막 시안





- 착수보고 자료

 착수 보고회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2026.3.18(수) 16:00~18: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수행기관: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발표 순서 1. 연구 개요 2. 연구 배경 및 목적 3. 연구 범위 및 방법 4. 연구 내용 5. 추진 체계 6. 추진 일정 7. 성과물
연구 개요 ● 용역 명 :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26년 3월 11일 ~6월 8일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비 : 8,639,000원 ● 발주기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 ● 수행기관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주요내용 ✓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조사·분석 ✓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역량 강화 및 실행 체계 마련 ✓ 지방의회의 입법·예산·감사·협치 기능을 통한 SDGs 실질적 이행 방안 도출	연구 배경 ●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일명 유엔SDGs)는 친환경 경제성장 및 사회형평성을 위한 범 지구적인 경제·사회·환경 정책 조정 및 실행 체계 ● 유엔은 SDGs 이행에서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법학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유엔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제도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매년 고위급정치포럼 개최 시 'SDGs 의회 총회' 개최) ● '의회'는 입법·예산·감사·협치 기능을 통해 공공 행정을 견인하고, 이행을 촉진시키는 주요 주체로서 의회의 SDGs 이행 역량 이 곧 행정 이행을 담보하는 원동력 ● 인천광역시시는 지난 2022년 12월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11월에는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추진체계 강화 필요. ●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회 내 적절한 대응 조직 및 체계와 더불어 구체적인 역할 과제 필요
연구 목적 1. 인천광역시의회 SDGs 이행체계 구축 방안 도출 2. 인천광역시의회 SDGs 이행추진 위한 시의회 역할 과제 도출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글로벌(UN), 국가(대한민국), 지방정부(인천광역시) 차원의 다층적 이행 체계 ● 시간적 범위 ✓ 현황 분석 : 2015년(UN SDGs 채택) ~ 2025년 현재 이행 현황 ✓ 미래 전망 : 2026년 ~ 2030년(목표 달성 시기) 및 Post-2030(2031년 이후) 전망 ● 내용적 범위 ①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조사·분석 ②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역량 강화 및 실행 체계 마련 ③ 지방의회의 입법·예산·감사·협치 기능을 통한 SDGs 실질적 이행 방안 도출
연구 방법 1. 문헌 조사·분석(양적 연구) · 선행 연구 자료 분석 :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역사 및 동향,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국제 합의문,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법령 및 조례, ▲국가 및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국가계획 및 공약 ·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 SDGs 이행 관련 국가 및 지방 의회 역할 사례 2. 표적 집단 인터뷰(FGI)(질적 연구) · 목적 : ▲ 문헌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현장 전문가 교차 검증 등을 통한 분석 신뢰성 제고, ▲인천 SDGs 목표, 지표, 이행점검체계,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 대상 : 인천시의원 1, 담당부서 공무원 1, 민관협력기구 1, 시민사회단체 1 등 4명 · 기간 : 2~3주 · 방법 : 대면 또는 온라인, 서면 설문 · 내용 : 인천SDGs 이행현황, 법제도 및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입법/예산 중심) 등	연구내용 목차(간) ● 요약 1. 개관 2.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3.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4.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 1) 인천SDGs 이행 동향 및 시사점 · 2) 인천SDGs 법제도 및 이행점검체계의 시사점 · 3) 인천광역시 주요 현안 분석 5.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역량 강화 및 실행 체계 현황 ·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체계 현황 및 시사점 · 2) 인천광역시 SDGs 이행 관련 입법 현황 및 시사점 · 3) 인천광역시의회 정책 연구 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체계 현황 6.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안 · 1) 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방안 · 2) 의회 기능별 역할 방안 · 3) 2026~2030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안)

서울매일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006면 사회

유승분 의원, 지방의회 중심 실행체계 구축 본격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SDGs 이행은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김대영 의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호 이사, 박차옥경 이

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및 전계숙 팀장, 인천시 송태진 정책기획관 및 조운경 팀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착수보고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호 이사가 맡아 'SDGs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윤 이사는 글로벌 SDGs 이행 동향과 함께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 국가 및 지방 보고체계(VNR·VLR) 등 국제적 이행 점검 구조를 설명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SDGs 정책 동향 및 법·제도 분석 ▶인천시 SDGs 이행 현황 및 정책 수요 진단 ▶지방의회 중심의 이행 점검체계 구축 ▶입법·예산·감시·협치 기능을 활용한 실행 과제



도출 등을 핵심 내용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인천시의회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가능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시 SDGs 이행 현황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의회 중심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유승분 대표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현되는 정책"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의 중심 주체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90일간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인천시의회 중심의 SDGs 이행 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입법·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정순학 기자

일간경기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004면 중합

인천시의회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 착수
2030년까지 단계별 과제 도출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법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인천시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이행 체계와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대영 의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및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SDGs 정책 동향 분석 △인천시 이행 현황 및 수요 진단 △지방의회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입법·예산·감시 기능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인천시의회)

를 활용한 실행 과제 도출 등이다.

특히 단순 정책 제안을 넘어 오는 2030년까지 적용 가능한 단계별 로드맵과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대표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선언이 아닌 입법과 예산으로 실현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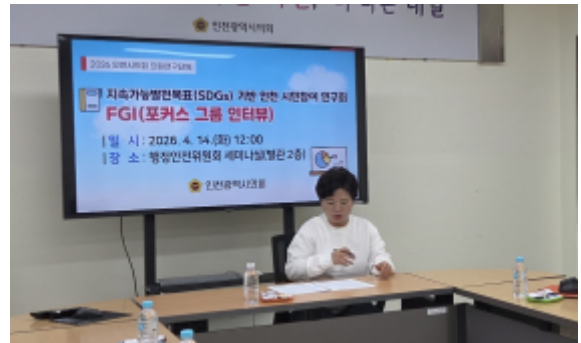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시의회 가 SDGs 이행의 핵심 주체로서 실질적

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향후 90일간 연구를 추진하며 구체적인 입법·정책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 제3차 정책연구용역 FGI

- 일 시 : 2026. 4. 14.(화) 12:00~14:3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등
- 참 석 : 유승분 대표의원, 박차옥경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최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전계숙 팀장,
정책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인천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SDGs 이행 및
거버넌스 개선 방향 도출
- 관련사진



- FGI 질문내용

1. 공통질문

- 개인 기본정보(이름, 소속, 직책, 지속가능발전 업무 경력)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정도
- ① [역사]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역사 40년을 설명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인천의 지속가능발전 역사 30년을 설명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인천 지속가능발전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
- ② [지속가능발전 개념] ▲17개 유엔SDGs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인천SDGs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
- ③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

2. 문헌분석결과 교차 검증

① 인천 지속가능성 평가의 현실 반영 정도

- 개인적인 경험상 인천 지속가능성(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4개 분야 중 잘 되고 있는 분야, 잘 안 되고 있는 분야는? 그 이유는?
- 2025 인천지속가능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제>사회>환경>제도행정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수긍하는가?, 수긍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 인천지속가능성 평가 결과가 인천광역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는가? 5점 만점 기준 평점을 준다면?
- 반영이 잘 안된다고 본다면(3점 이하) 그 이유는?

② 2026-2030 인천SDGs 세부목표 및 지표의 현실 적합성

- 개인적인 경험상 인천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력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그 이유는?
- 개인적인 경험상 인천 지속가능성 OO분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 인천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또는 인천의 현안을 고려할 때, 최근 수립된 인천 SDGs의 세부목표가 인천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고 보는가? 기여 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 인천SDGs 세부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 인천SDGs 세부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③ 인천SDGs 이행점검체계의 효율성, 효과성

- 개인적인 경험상 현재 인천SDGs 이행점검체계(정부)가 인천 지속가능성 개선에 효율적,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지? 5점 만점 기준을 몇점으로 평가할 것인지, 효과적이지 않다면(3점 이하) 그 이유는?
- 개인적인 경험상 인천SDGs 이행점검체계의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 개인적인 경험상 현재 인천SDGs 이행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지? 5점 만점 기준으로 몇점인지, 효과적이지 않다면(3점 이하) 그 이유는?

- 개인적인 경험상 인천지속가능발전협회의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

④ 인천시의회 역할 효과성

- 지난 30년 동안 인천SDGs 이행 추진 시 인천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입법, 예산, 감독, 대의 활동 관련 인천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시의회의 조례제정, 예산승인 과정에서 시의원 개인, 행정부서, 인천지속협, 시민사회는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⑤ 기타

- ① 2030년까지 주력해야 할 인천SDGs 세부목표 및 지표(우선순위 3가지)
- ② 2030년까지 개선해야 할 이행점검체계(우선순위 3가지)
- ③ 인천시의회의 역할 과제(우선순위 3가지)

1. 개인 기본정보 : ○○○ 인천광역시의원 인터뷰

○○○ 인천광역시의원입니다. 시민사회와 교육·복지·지속가능발전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으며, 특히 인천지속가능발전협회 사무처장과 인천YWCA 부회장 등의 경력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가까이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입법, 예산, 정책 점검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정도

저는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와 개념, 그리고 관련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실무 경험과 의정 활동을 통해 비교적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지속가능발전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SDGs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 논의에도 함께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을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제도와 실행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엔 SDGs 17개 목표와 지역 단위 SDGs의 의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분야만의 과제가 아니라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를 함께 아우르는 통합 정책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문헌분석결과 교차 검증

3-1. 인천 지속가능성 평가의 현실 반영 정도

개인적인 경험상 인천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나, 환경과 거버넌스 분야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인천은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이지만, 동시에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양 생태계 훼손, 생활권 환경 격차, 정책 이행 체계의 한계 등 구조적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경제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안전과 행정의 책임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 인천지속가능성평가 결과가 경제>사회>환경>제도행정 순으로 양호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할 수 있으나, 현장의 체감 문제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수치상 강점을 보일 수 있지만, 환경과 제도행정 분야는 장기적 구조개선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표상의 순위보다 실제 이행력과 시민 체감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속가능성 평가 결과가 실제 인천광역시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하자면 3점 정도로 판단합니다. 평가와 진단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결과가 예산 편성, 사업 우선순위 조정, 부서 간 협업 강화로까지 충분히 연결되는 수준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 책임체계 안에 두는 제도 개선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지속가능발전이 여전히 일부 부서의 과제나 선언적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고, 둘째 평가 결과가 곧바로 예산과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약하며, 셋째 시민과 의회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결 구조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2. 2026~2030 인천SDGs 세부목표 및 지표의 현실 적합성

개인적인 경험상 앞으로 인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분야는 환경과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이미 성장 기반을 갖춘 도시이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성은 결국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권 보장,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천은 해양도시라는 특성이 뚜렷하므로, 해양생태계 보전과 폐기물 관리,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분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강화, 연구개발 예산 확대, 수도권매립지와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보다 투명한 관리, 기후위기 대응형 도시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지역 간 생활환경 격차 완화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해양 R&D 투자 확대와 재난예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학생과 시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수립된 인천SDGs 세부목표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인천의 지속가능성 개선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추상적인 목표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인천의 해양도시 특성,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 환경정의, 시민참여 거버넌스 등 지역 현실을 반영한 인천형 실행과제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세부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 역시 기본 틀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일부는 현장의 체감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과 거버넌스 분야는 단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 체감도, 정책의 실효성, 지역 간 형평성, 부서 간 협업 수준까지 함께 살펴야 보다 현실적인 점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과제 역시 선언 수준을 넘어서 입법, 예산, 행정 조정 방식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3-3. 인천SDGs 이행점검체계의 효율성·효과성

현재 인천SDGs 이행점검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자면 3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기반은 점차 마련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이 실제 행정 운영과 예산 체계, 정책 조정 과정에 얼마나 깊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놓고 보면 아직은 보완이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실행력을 더 높이는 방향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행점검체계의 개선 방향으로선 첫째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중심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지표 평가 결과를 예산 심사와 사업 점검에 실질적으로 연계하며, 셋째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공개 점검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은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봅니다.

현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와 운영은 민관 협치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정책 반영력과 점검 기능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성을 점수로 표현하면 3~4점 정도로 볼 수 있으며, 협의회가 시민사회와 행정, 의회를 연결하는 구조로서 보다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정책 제안과 행정 실행 간 연계 강화, 청년·학생·현장 전문가의 참여 확대, 분야별 이행성과의 공개, 시의회와의 정례 협의체계 구축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은 특정 세대나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므로,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와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4. 인천시의회 역할 효과성

지난 30년 동안 인천SDGs 이행 과정에서 인천시의회는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단순한 견제 기능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을 점검하는 보다 주도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 의회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다루는 만큼, 생활정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인천SDGs 이행을 위해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활동은 조례 정비와 입법 강화,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SDGs 관점 반영, 성과 부족 사업에 대한 행정감시 강화, 그리고 시민사회·전문가와와의 협치 제도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격상을 가능하게 한 조례 개정과 같이, 시의회는 선언을 실행으로 바꾸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 제정과 예산 승인 과정에서 의원 개인은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행정부서는 이를 실행 가능한 사업과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민사회는 현장 의견 수렴과 감시, 협치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속가능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의회·행정·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기타

4-1. 2030년까지 주력해야 할 인천SDGs 세부목표 및 지표(우선순위 3가지)

첫째,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인천의 도시 특성을 고려할 때 해양생태계 보전, 폐기물 관리,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생활권 환경안전 지표 강화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민 건강과 환경정의 실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월마을 등 환경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정보 공개, 지역 간 환경격차 해소는 인천형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거버넌스와 정책 이행력 강화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실제 예산과 사업평가에 연동되는지, 시민참여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 2030년까지 개선해야 할 이행점검체계(우선순위 3가지)

첫째,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중심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 특정 부서의 개별 정책이 아니라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기준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둘째, 평가와 예산, 사업 조정 간의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개 점검 시스템 마련입니다. 연례보고와 공개토론, 시민 체감도 점검을 정례화해 실질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 인천시의회역의 역할 과제(우선순위 3가지)

첫째,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와 제도의 선제적 정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제도로 연결되어야 하며, 시의회의 입법 기능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 심사에서 SDGs 관점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집행률이 아니라 정책이 시민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까지 살펴보는 예산 심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과의 소통 확대와 생활정치의 실천입니다. 지방정치는 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치이며,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시의회에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4차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간담 및 토론) 개최

- 일 시 : 2026. 5. 6.(수) 14:00~17:1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등
- 참 석 : 유승분 대표의원, 윤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박차옥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인천시 주운경 정책기획관 팀장 등 8명
-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 최종보고
- 관련사진



현수막 시안



홍보전단지





- 최종보고 자료

 출처: 인천일보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2026.5.6.(수) 14:00~16: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수행기관: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6.5.6.(수) 14: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최종 보고회
--	-----------------

발표 순서	1. 연구 개요 2. 연구결과 1)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2)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3)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4) 표적 집단 인터뷰: 현장에서 본 인천 SDGs 이행 현황 및 과제 5)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역량 강화 및 실행 체계 현황 6)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안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6.5.6.(수) 14: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

연구 개요 - 연구 개관 - 연구 배경 및 목표 - 연구 내용 - 연구 방법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6.5.6.(수) 14: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

연구 개관 - 용역 명: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 용역기간: 2026년 3월 11일 ~6월 8일 (학술일로부터 90일) - 용역비: 8,639,000원 - 발주기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 - 수행기관: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주요내용 -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조사·분석 -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역량 강화 및 실행 체계 마련 - 지방의회의 입법·예산·감사·협치 기능을 통한 SDGs 실질적 이행 방안 도출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6.5.6.(수) 14: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

연구 배경 및 목표 배경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일명 유엔SDGs)' 채택, 친환경 경제성장 및 사회형평성을 위한 범 지구적인 경제·사회·환경 정책 조정 및 실행 체계 - 유엔은 SDGs 이행에서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변혁적인 유엔SDGs 이행을 위해서 적절한 법제도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 유엔SDGs 의회 총회 개최 -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회 내 적절한 대응 조직 및 체계'와 더불어 구체적인 역할 과제 필요 목표 - 인천광역시 시의회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 체계 구축 방안 도출 -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인천SDGs) 이행 추진을 위한 시의회 역할 과제 도출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6.5.6.(수) 14: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

연구내용 목적(안) - 요약 I. 개관 II.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III.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IV.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1. 인천SDGs 이행 동향 및 시사점 2. 인천SDGs 법제도 및 이행점검체계와 시사점 3. 인천광역시 주요 현안 분석 V. 표적 집단 인터뷰: 현장에서 본 인천 SDGs 이행 현황 및 과제 VI.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역량 강화 및 실행 체계 현황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체계 현황 및 시사점 2. 인천광역시 SDGs 이행 관련 입법 현황 및 시사점 3. 인천광역시의회 정책 연구 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체계 현황 VII.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안 1. 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방안 2. 의회 기능별 역할 방안 3. 2026-2030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안)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6.5.6.(수) 14: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	--

연구 방법 분석 체계 <table><tr><th>2026-2030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안)</th></tr><tr><td>인천시의회 SDGs 이행점검 체계 및 역할 방안 - 세계의회의연합(UNA), 세계지속가능발전목표(UNSDG)가 발간한 '의회' SDGs 이행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 - 의회 구조적, 제도적, 조직, 인력, 교육, 정보, 데이터 활용 - 의회 기능별 역할(입법·예산·감사·협치) </td><td>인천광역시 SDGs 이행점검체계 및 이행 현황에 문제제기 - 유엔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 및 지방정부 국가보고서(UNGA)를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및 법규 제정을 기반으로 이행점검체계 분석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행위계획, 실천은행계획, 제1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6-2045)) 2025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및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을 중심으로 인천SDGs 이행 현황 및 실행 방안 분석 </td></tr><tr><td>해외 사례 분석</td><td>표적 집단 인터뷰(FGI)</td></tr><tr><td>유엔SDGs '개념' 및 '의제'와 법제도 및 정치·사회적 여건</td><td></td></tr></table> ◆ 분석 전략 ① 국제 지침·권고 기준(유엔SDGs, 세계의회연맹 등) 인천SDGs 법제도 및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한 SDGs의 인천시정 통합성 평가와 시의회 역할 과제 도출 ② FGI 및 제9대 시의회 공약 연계 분석을 통한 인천SDGs 정책 및 이행점검체계 실효성 평가와 시의회 역할 과제 도출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6.5.6.(수) 14: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2026-2030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안)	인천시의회 SDGs 이행점검 체계 및 역할 방안 - 세계의회의연합(UNA), 세계지속가능발전목표(UNSDG)가 발간한 '의회' SDGs 이행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 - 의회 구조적, 제도적, 조직, 인력, 교육, 정보, 데이터 활용 - 의회 기능별 역할(입법·예산·감사·협치)	인천광역시 SDGs 이행점검체계 및 이행 현황에 문제제기 - 유엔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 및 지방정부 국가보고서(UNGA)를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및 법규 제정을 기반으로 이행점검체계 분석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행위계획, 실천은행계획, 제1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6-2045)) 2025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및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을 중심으로 인천SDGs 이행 현황 및 실행 방안 분석	해외 사례 분석	표적 집단 인터뷰(FGI)	유엔SDGs '개념' 및 '의제'와 법제도 및 정치·사회적 여건		연구 방법 1. 문헌 조사·분석(양적 연구) - 선행 연구자료 분석: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역사 및 동향,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국제 합의문,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법령 및 조례, ▲국가 및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국가계획 및 공약 -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SDGs 이행 관련 국가 및 지방 의회 역할 사례 2. 표적 집단 인터뷰(FGI)(질적 연구) - 목적: ▲ 문헌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현장 전문가 교차 검증, ▲ 인천 SDGs 목표, 지표, 이행점검체계,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 대상: 인천시의원 1, 담당부서 공무원 1, 민간참정자 1, 시민사회단체 1 등 4명 - 기간: 2-3주 - 방법: 대면 또는 온라인, 서면 설문 - 내용: 인천SDGs 이행현황, 법제도 및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입법/예산 중심) 등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6.5.6.(수) 14:00,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2026-2030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안)								
인천시의회 SDGs 이행점검 체계 및 역할 방안 - 세계의회의연합(UNA), 세계지속가능발전목표(UNSDG)가 발간한 '의회' SDGs 이행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 - 의회 구조적, 제도적, 조직, 인력, 교육, 정보, 데이터 활용 - 의회 기능별 역할(입법·예산·감사·협치)	인천광역시 SDGs 이행점검체계 및 이행 현황에 문제제기 - 유엔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 및 지방정부 국가보고서(UNGA)를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및 법규 제정을 기반으로 이행점검체계 분석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행위계획, 실천은행계획, 제1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6-2045)) 2025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및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을 중심으로 인천SDGs 이행 현황 및 실행 방안 분석							
해외 사례 분석	표적 집단 인터뷰(FGI)							
유엔SDGs '개념' 및 '의제'와 법제도 및 정치·사회적 여건								

추진 체계



1.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2.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3.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4. 표적 집단 인터뷰: 현장에서 본 인천 **SDGs** 이행 현황 및 과제
5.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역량 강화 및 실행 체계 현황
6.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언

연구 결과

I.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1. 지속가능발전 국제 이행 동향

1)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환경보호·경제성장·인권보장 달성의 통합

- 빈곤, 불평등과 환경파괴의 악순환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사회안전·환경보호의 조화**로운 추진을 제안하는 **‘정치적’ 개념**
- ‘지속가능발전 2030’이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조약이 아니라, 기존의 틀에서 있던 헌법, 환경 등 국제 규범들을 하나의 통합된 틀 안에서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고안된 방지구체 정책 실행 체계
- 유엔SDGs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권 개념은 198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발견권(Right to Development)’**으로, 모든 인간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그 성과를 향유할 권리를 의미함. **경제·교육·노동·환경·평화** 전 과정에서 인권 원칙(참여, 투명성, 책임성, 비차별 등)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



I.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1. 지속가능발전 국제 이행 동향

2) SDGs 체제의 시점

- ‘의제21’의 환경과 개발의 대담적 야망을 통합적으로 전환
- **국가 및 국제 이행 체계를 강화**하게 만드는 토대
- 빈곤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제도적 불평등, 부당한 가버넌스, 지속불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
- SDGs는 ‘성장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표, 즉, **성장 역량의 공평한 분배, 분배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구 환경 특성을 감안하는 ‘구조적 정의(Structural Justice)’**를 실현



I.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1. 지속가능발전 국제 이행 동향

3) 2030년 이후 SDGs 체제 전망

- **2022년 유엔 총회**에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일명 **환경권**)’를 기본 인권으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
- 2024년 유엔 미래정상회의에서 **‘미래협약(Pact for the Future)’**이 채택되었는데, 5대 핵심 의제로 **▲SDGs 이행 강화, ▲국제 평화·안보 강화, ▲오두름을 위한 디지털 전환, ▲미래세대 참여 강화, ▲유엔 가버넌스 개혁**이 제시
- 2024년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등 주요 환경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행 계획 마련 관련하여 중요한 결의가 있었으며, **보조금보다 민간투자, 시장기반 금융지원 등 민간 자원 조성이 합의**
- 민간 자원 비중이 커지면서 2030년 이후 **글로벌 가버넌스**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

I.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2. 지속가능발전 국내 이행 동향

1) 국내 지속가능발전 운동 역사와 시사점

-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 시민사회운동들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추진 과제인 **‘지방의제21’이 처음 도입**
- **2009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O)** 설치 이후 환경부 소관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추진되다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가 이행 가버넌스가 구축
- 2015년 유엔SDGs가 채택되면서 **‘환경 중심 지속가능발전 가버넌스’가 ‘국제개발협력’으로 확장**되기는 했으나,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핵심 주제, 법제도 및 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

I.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2. 지속가능발전 국내 이행 동향

2) 한국의 유엔SDGs 이행 현황과 특징

- **2025년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집수는 78.1점으로 **167개국 중 34위를** 차지, 2019년 18위 이후 계속 하락
-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수준이 미진한 가운데, 특히, **기후(SDG 13), 해양 및 육상 생태보전(SDG 14, 15)** 등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부족
- **국가ISOs(2018)** 자료의 분석 결과 **총체 현황**을 보면, **성별(15.2%, 7.0%)**, **연령별(20.2%, 9.3%)**, **장애유무(10.2%, 4.7%)**, **소득수준(17.2%, 7.9%)** 등 기본적인 대타이 세분화 수준이 **10% 미만으로 상당히 낮아 취약계층 인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 역할이 존재**



I.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2. 지속가능발전 국내 이행 동향

3) 2026-2030년 한국의 유엔SDGs 이행 전망

- 이행방향(2025.6-2030.5)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 조성’ 선정, 유엔SDGs 연계 현황을 보면, **123개 국정과제 중 116개(94.3%)가 유엔SDGs와 관련**
- 정부(국조실): **2027년 제3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번째 VNR을 제출할 예정**
- 지방정부: 총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57개(23.5%), 광역 15개/기초 42개가 지속가능발전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ICLEI)에 참여, **지난 10년 동안 지방정부 4곳(서울·세종·대구·수원시, 대전시, 화성시) 자발적 지방정부 보고서(VLR)를 유엔에 제출**
- 기업: **상장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확산**, 2026년 이후 ESG 의무 공시 도입 예정
- 현재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참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ESG경영고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 계류 중
- 글로벌 ESG 투자 및 경영 규제 등 경제정책 동인이 국내 SDGs 이행에 영향

II.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1. 의회의 역할 근거 및 국제 동향

-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에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
- 각국 의회는 **‘세부목표 16.6’(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투명한 제도를 구축한다)**과 **16.7’(모든 수준에서 민감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한다)’를 이행할 책무**
- **‘세계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은 2015년 제132차 총회에서 SDGs 이행을 위한 의회 역할을 천명하는 ‘하노이 선언’을 채택**, 정기 세미나와 매년 7월 유엔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부대행사로 의회 정상회의를 개최

II.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2. SDGs 이행과 의회의 역할

1) 의회 기능별 역할

- **세계의원연맹(IPU)은 SDGs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의회의 입법·예산·감사·대의 등 핵심 기능을 통해 어떻게 SDGs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
- 의회의 SDGs 관련 역할을 평가하는 **‘자체 평가(Self-Assessment)’** 과정을 통해 의회의 인적·물적·정치적 자원·역할·대외 협력적 연계를 진단할 것을 권고
- 의회의 입법 기능 관련하여, **‘SDGs 기반 입법 심사(SDG-informed Legislative Scrutiny)’**를 제안. 입법 전과 입법 후 심사 과정에서 의회들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서의 핵심 역할을 제시
- 의회의 예산 기능 관련하여, **‘SDGs 기반 예산 심사’** 제안. SDGs 이행을 위한 **‘예산, 예산 지출, 예산 과정 모니터링’**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



II.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2. SDGs 이행과 의회의 역할

2) SDGs 이행을 위한 의회 추진기관 구축

- 세계반부패의원연맹(GOPAC)은 의회가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주도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 다과와 같은 체계적인 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



SDGs 이행과 의회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II.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3. 해외 사례

- 유럽연합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ESDN)가 2021년 유럽연합 회원국 24개 의회를 대상으로 SDGs 기반 의회 활동 현황 조사
- 조사에 참여한 24개 국가의 모든 의회에서 최소 한 번 이상 SDGs가 본회의의 명시적인 토론 주제로 다루어졌으나, 세계의원연맹(WFP)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SDGs 이행 구조 및 체계를 구축한 의회는 없었으며, 입법-예산-감독-대외 활동 등 과정 모두에서 SDGs 접근이 활발한 의회 역시 있는 것으로 조사
- 주로 입법 활동 시에 SDGs 접근이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22개국), 국정 질의 등 감독 활동(20개국), 예산 심의 과정(12개국), 대외 활동(7개국) 순으로 SDGs 접근 사례가 조사
- 많은 국가에서 SDGs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기후, 환경 등 관련 이슈를 다루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지속가능발전권을 주로 환경, 토지 이용, 농업 위원회나 환경부에 해당하는 등 환경 문제에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
- 의회 내 지속가능발전 전담 위원회 설치의 경우, 대내외적인 명확한 소통 창구가 된다는 장점이 존재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해당 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지루해 버리는 한계가 현상을 초래하는 등 영향이 존재
-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많은 의원들이 SDGs를 잘 알고 있으나, 단순한 환경 및 국제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경우가 다수

SDGs 이행과 의회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II.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3. 해외 사례

- 1) 의회 추진 기반: 지속가능발전 전담 기구 설치 운영
 - 핀란드: '미래위원회' 1993년에 임시 위원회로 설치된 후 2001년 부터 상설기구로 전환,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입장(제안/상향 조치 제안) 발표. 정부는 유속조치 보고 의무, 이외에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와 세미나리 등 개최
 - 독일: '지속가능발전 의회 자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대한 입법문서를 본회의에서 보고, 입법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
- 2) 입법활동
 - 튀니지: 지속가능발전 헌법기구 설치 및 환경에 대한 헌법적 및 법적 보호(2014)
 - 독일: 입법 시 핵심 지침으로 채택, 입법 시 SDGs 연계 및 SDGs 영향평가 실시
- 3) 예산심의
 - 프랑스: 2021년에 녹색 예산(green budget) 도입, 개별 예산 항목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6개 영역: 기후변화 완화/기후변화 적응/생물다양성보존/순환경제전환/오염 방지 및 통제/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복원, 3단계: 유익/중립/불리)
 - 오스트리아: 정부 예산의 SDGs 영향 분석, 의회 사무처 소속 예산처(budget office/service)가 지속가능발전 및 SDGs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예산을 직접 분석
- 4) 감독
 - 독일 & 핀란드 & 스웨덴: 정부의 SDGs 이행 현황 보고서 제출 의무화
- 5) 대외
 - 독일: '시민사회 협의회(civil society council)'를 통해 견제-언론-협업
 - 프랑스: '의회와 시민(Parlement & Citizens)'를 통해 SDGs 국가 로드맵 의견 수렴
- 6) 지방자치
 - 스웨덴: 바르셀로나조: SDGs 전략 계획 수립, SDGs 7번 에너지, 물, 기후, 구상된 역량강화, 자치주 내 지자체 지원, 대외협력 활동(세계의원연맹, 스웨덴 한국 지속가능발전 지방간 네트워크 등 적극 참여)

SDGs 이행과 의회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II.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4. 국내 적용 방안

1) 대한민국 의회 운영 체계 및 지원 조직 현황

-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국회에서는 국무조정실 대응 상설위원회의 '정부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 및 정책제정 담당
-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청장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의정연구원 등 국회 핵심 지원 조직 체계 내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당 기구' 두는 부서가 없고, 제22대 국회(2024-2028)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또는 유엔SDGs 관련 정책 연구나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제22대 국회(2024-2028)의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2026년 2월 말 기준 70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지속가능발전' 또는 유엔SDGs 관련 정책 연구 논의 모임은 '국회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2024)'이 있음, 다만, 17개 유엔SDGs 주제분야를 아우르기 보단 ODA 및 국제협력 정책 분야에 초점
- 비공식적으로 '국회ESG포럼(2024, 대표의원 민병택-정희룡)'이 유엔글로벌컴팩트 한 협력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협력하여 운영

SDGs 이행과 의회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II.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4. 국내 적용 방안

- 2) 의회 운영 및 지원 조직 체계 구축 방안
 - ① [헌법기구] 국회의장 및 조처 개정을 통한 상설위원회의 설치 또는 의회 의결을 통한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 ② [헌법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소관 심판 또는 특별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 전담 전문위원회 배치
 - ③ [정책연구] 의회연구기관 내 핵심 연구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설정
 - ④ [역량강화] 의회 교육 연수기관의 '상설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 연수 강화 운영
 - ⑤ [정보공개] 의회/의원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국제적 영향 강화
- 3) 의회 기능별 역할 방안
 - ① [입법] 헌법 개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권' 보장과 입법 시 SDGs 연계 영향 평가 실시
 - ② [예산] 정부 예산안에 대한 'SDGs 영향 평가' 분석 시행
 - ③ [감독]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입장 문서 발표
 - ④ [대외] '가칭'의회-이해관계자 지속가능발전 포럼 운영
 - ⑤ [대외협력] 국내외 의회/의원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국제적 영향 강화

SDGs 이행과 의회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III.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차사회적 여건

1. 인천SDGs 이행 동향 및 시사점

- ◆ 목적: 국제 지침인 유엔SDGs의 인천 SDGs 정책 내 통합성 분석
- ◆ 분석 내용
 - ① 유엔SDGs와 인천SDGs(2021-2040/2026-2045)의 연계 정도
 - ② 유엔SDGs 5개 분야별(경제, 사회, 환경, 평화, 문화, 이념수단) 분야 특징
 - ③ 인천SDGs(2021-2040) 이행 평가 결과 및 정책 발전성 분석
 - ④ 인천SDGs 개선 과제 도출
- ◆ 유엔SDGs 169개 세부 목표 중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세부 목표는 154개(91%), 이를 기준으로 몇 개의 유엔SDGs 세부목표가 인천SDGs와 연계되는지 분석

유엔SDGs	제2차인정기본계획(2026) (인정 인천SDGs 2026)	제3차인정기본계획(2027) (인정 인천SDGs 2027)
✓ 목표: 17개 ✓ 세부목표: 169개	✓ 목표: 17개 ✓ 세부목표: 19개	✓ 목표: 17개 ✓ 세부목표: 30개
	-	✓ 2025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SDGs 이행과 의회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III.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차사회적 여건

1. 인천SDGs 이행 동향 및 시사점

- 1) 유엔 SDGs와 인천 SDGs 통합성 및 개선 과제
 - 154개 유엔SDGs 세부 목표 중 '인천SDGs 2026'에 반영된 세부 목표는 59개(38.3%)로, 유엔SDGs와의 연계 정도가 절반 이하를 밑돌아 정책 통합성 낮은 것으로 조사
 - 인천SDGs에 반영된 59개 유엔SDGs 세부 목표는 5대 분야별(경제, 사회, 환경, 평화, 문화, 이념수단) 분야별(16개, 27.1%), 경제분야(15개, 25.4%), 거버넌스(7개, 11.9%), 이념수단(1개, 1.7%)순으로 연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 특히, '3. 건강과 웰빙', '8. 경제성장과 일자리', '15.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한 인천SDGs 세부 목표가 다수 분포,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에서 정책 우선 강령성을 확인
 - 유엔SDGs와의 정책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154개 유엔SDGs에 대응한 인천 시민의 세부목표 및 지표 수립이 필요

<5대 분야별 '인천SDGs 2026'과 연계된 유엔SDGs 세부 목표 분포>						
구분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이념수단	연계정도
유엔SDGs 세부 목표(%)	15	20	16	7	1	59
비중(%)	25.4	33.9	27.1	11.9	1.7	100.0
						38.3

SDGs 이행과 의회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III.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차사회적 여건

1. 인천SDGs 이행 동향 및 시사점

- 2) 인천SDGs 이행 현황과 개선 과제
 - '2025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 2025)'를 바탕으로 평가
 - '보고서 2025'는 '인천SDGs 2021' 17개 목표, 30개 세부목표 138개 지표에 대한 이행 평가 보고서이자 태평에 '인천SDGs 2026'과 차이 존재
 - '인천SDGs 2021'의 경우, 73개(47.7%)의 유엔SDGs 세부목표와 연계되어, 여전히 절반 이하의 정책 통합성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천SDGs 2026'보다는 유엔SDGs와의 정책 통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인천SDGs 2021'의 유엔SDGs 5대 분야별 분포를 보면, 사회분야(31개, 42.5%), 경제분야(18개, 24.7%), 환경분야(16개, 21.9%), 거버넌스분야(7개, 9.6%), 이념수단분야(1개, 1.3%)순으로 연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5대 분야별 '인천SDGs 2021/2026'과 연계된 유엔SDGs 세부 목표 분포 비교>									
구분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이념수단	계	연계율(%)		
인천SDGs 2026 (7개, 9%)	15 (25.4)	20 (33.9)	16 (27.1)	7 (11.9)	1 (1.7)	59 (100.0)	38.3		
인천SDGs 2021 (7개, 9%)	18 (24.7)	31 (42.5)	16 (21.9)	7 (9.6)	1 (1.3)	73 (100.0)	47.7		

SDGs 이행과 의회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III.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차사회적 여건

1. 인천SDGs 이행 동향 및 시사점

- 2) 인천SDGs 이행 현황과 개선 과제
 -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한 지표 41개 중 18개(43.9%)가 양호, 21개(51.2%)가 미흡을 전반적으로 인천광역시의 SDGs 이행률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조사
 - 특히, 사회분야의 SDGs 이행률이 가장 떨어져서 미흡으로 평가된 21개 중 9개(42.8%)가 사회분야 지표로, 주로 사회안전과 지역 안전 관련 지표가 취약
 - 한편, '보고서 2025' 보고서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표 중 21개의 지표를 제시(경제 2개, 사회 9개, 환경 8개, 제도행정 2개)하였으나, '인천SDGs 2026'에 반영된 지표는 5개(하수처리수,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비, 도시 공영 조성, 안전, 사회적기업) 및 사회분야 대상자 비율,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액도 정책 일관성이 매우 취약
 -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고서 2025'에서 개선해야 할 지표는 인천SDGs 2026에서도 지속적으로 이행 관리 필요

SDGs 이행과 의회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III.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차사회적 여건

1. 인천SDGs 이행 동향 및 시사점

<유엔SDGs와 인천SDGs의 통합성 제고를 위한 인천SDGs 추가 수립 분야 현황>				
구분	유엔 SDG	세부목표	의회 소관위원회	
경제 (22)	SDG 2	2.5 유전자원 / 2.a 농업ODA / 2.b 농업보조금	산업경제위원회	
	SDG 7	7.1 에너지전환 / 7.A 연구개발협력 / 7.B 에너지ODA	산업경제위원회	
	SDG 8	8.2 생산성 / 8.4 자립소비 효율성	산업경제위원회	
	SDG 9	9.3 고품질연구 / 9.A 인프라ODA / 9.B 연구ODA / 9.C ICT연구	산업경제위원회	
	SDG 10	10.5 금융시장 / 10.B 개발재원	산업경제위원회	
	SDG 12	12.1 정책통합 / 12.2 자원효율 / 12.6 기업ESG / 12.A 지향순환기술 / 12.C 화석연료보조금	산업경제위원회	
	SDG 14	14.6 어업보조금 / 14.7 해양자원 / 14.B 양식어업	산업경제위원회	

SDGs 이행과 의회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서울특별시의회 중상

V.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역량 강화 및 실행 체계 현황

3.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연구 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체계 현황

1) 정책연구개발 지원 체계 현황 및 과제

- 인천광역시회의의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구 지원 조례>를 통해 의원 정책 연구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
- 인천광역시 제9대 의회(2022.7.-2026.6.)에서는 지난 총 61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원연구단체**는 2026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시민참여연구회'가 처음
- 지난 2022년 7월~2026년 3월까지 시의회에서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는 총 35건으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연구보고서는 없음**

2) 역량강화 지원 체계 현황 및 과제

- 시의회 의원 및 직원 교육 연수 지원 관련하여, 시의회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구 지원 조례>, 사무처 직원(전문위원, 정책지원관 포함)은 인천광역시 인제개발원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
- 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의 경우, 지난 2023년~2025년 3년 동안 공공위탁교육 10건, 자체교육 20건, 민간위탁교육 12건으로 총 42건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은 부재**
- 시의회의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소(한국환경연구원)를 통한 공공위탁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 전문 연구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한 **인간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의회 사무처 직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인제개발원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해결되는데, 현재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정이 부재하므로 **인제개발원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개설 필요**

SDGs 이행과 지방자치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립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4.6.4(주) W&W,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소집

VI.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언

1. 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방안

1) 조례 개정 또는 의회 의결을 통한 '상설위원회' 설치·운영 및 전달 인력 배치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상설 '기정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예: 윤리특별, 예결특별)
- 또는 제10대 인천시의회(2026.7.-2030.6.) 첫 회차 시 2030.6월을 기점으로 하는 「기정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을 의결
- 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조례안 및 정부예산안에 대한 SDGs 영향 평가 실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인천광역시 입법과제 연구,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6개 상임위 및 예결특별위에서 자문-컨소
- 구성: 인천시의회 6개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속 의원 1인씩 총 7인을 기본으로 구성하여 각 상임위 및 예결특별 위에서의 구조적 연계 체계 구축

2) 시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연수 체계 구축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소(한국환경연구원) 또는 인천광역시 전문 연구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시의원 대상 매년 '지속가능발전' 위촉교육 추진
- 인천광역시 인제개발원(예: '지속가능발전' 교육 과정 개설·운영을 통한 의회 사무처 직원 교육 추진)

SDGs 이행과 지방자치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립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4.6.4(주) W&W,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소집

VI.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언

1. 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방안

3)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정보 포털 운영

- 현행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기정인천SDGs 의정 활동」 메뉴 추가 개설** 주 관련 의원활동보고서, 정책자료 및 보고서 등 정보 제공 (예: 인천SDGs 관련 입법 활동, 공약 이행률 등)

4) 정부 통계기관 및 감사기관과의 협력

- 국가데이터지** 및 **인천광역시 통계기관과의 협력**: 국가데이터지 SDGs 통계 포털 및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기획조정실)의 데이터에 의뢰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로 구축
- 인천광역시 감사관 및 시민감사관과의 협력: 정부 예산안 SDG 이행률 용역에 쓰였는지 추적하기 위해 감사기관과 협력하여 성과 감사 보고서를 공유하고 심층 검토

5) 국제SDGs 이행참정체계 참여

- 세계의협연맹(IPU) 주관 'SDGs 포럼'(매년 7월, 뉴욕)**: SDGs 관련 의회 활동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인천시의회 SDGs 의정 활동 공유 등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 고위급 정치포럼(매년 7월, 뉴욕):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매년 2월, 방콕)**,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포럼(매년 10월 등): SDGs 관련 정부 및 이해관계자 활동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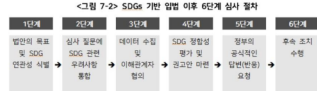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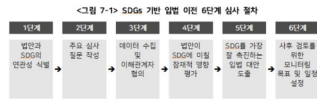
SDGs 이행과 지방자치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립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4.6.4(주) W&W,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소집

VI.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언

2. 의회 기능별 역할 방안

1) 입법: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 'SDGs' 기반 입법 심사 실시

- 법안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또한 SDGs에 공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적 장에 어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고려



SDGs 이행과 지방자치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립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4.6.4(주) W&W,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소집

VI.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언

2. 의회 기능별 역할 방안

2) 예산: 정부 예산안에 대한 'SDGs' 연계 예산 분석

- 법에 따른 '당연지 예산제도', '운실가소감축안지 예산제도'와 유원의 'SDGs 연계 예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정부 예산안이 인천SDGs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거나 반영
- 정부 예산안 SDGs와 가장 부합하는 인천시의회에 **예결특별위**를 통해 진행하거나, **인천광역시의회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SDGs 연계 예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

3) 행정 감독: '인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인천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회 의결문서 발표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인천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평가 및 추속 조치 요청 내용을 담은 **입법문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응답**을 받는 체계를 시행
-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기정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담당 가능
- 한편, 인천SDGs 세부목표별 소관 상임위원회가 시장 질의를 통해 행정부서별 이행을 촉진

4) 대의: 「기정인천SDGs 의정 포럼」 등 공론장 마련

- 「기정인천SDGs 의정 포럼」 등 공론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인천 내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들과의 소통·협의**의 채널 마련
- 지속가능발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나 '기정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의 자원의 정책·대의 활동 일환으로 추진하거나, 의원연구단체 차원에서 진행 가능

SDGs 이행과 지방자치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립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4.6.4(주) W&W,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소집

VI.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언

3. 2026-2030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안)

1) 인천광역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

- 의사규칙 개정: **법안이 예산안에 의회에 도입될 때** 해당 법안이 SDG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SDG 영향 분석(SDG Impact Analysis)'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의사규칙을 개정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조례> 개정: **상설 「기정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할 운영 조례> 개정: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전달 **전문위원 및 소장의 사무직원 배정**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
 - 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초로 위촉자**를 명시(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농어민 등)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5년) 및 평가(2년) 시 **이해관계집단 참여 속의공론체계 구축 운영 의무화**
 - 지속가능발전 전문 포럼을 통한 인천SDGs 이행 현황 및 관련 자료 **정보의 상시 공개** 의무 명시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과 평가보고서의 **의회 보고 의무** 명시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유엔SDGs 및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9조 2항에 따른 속의공론체계(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대표성, 책무성에 근거하여 **합의와 위원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및 방법, 권한 및 책무 명시**
 - 인천SDGs 연계 **합의와 실천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 보고**서 공표 의무 명시

SDGs 이행과 지방자치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립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4.6.4(주) W&W,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소집

VI.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언

3. 2026-2030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안)

2) '인천SDGs 정책과제(2026-2030)' 추진 및 'Post 2030 의제' 대응 입법 과제 도출 정책연구 추진

- 소관 위원회 차원에서 정기적인 SDGs 국내외 주요 정책 및 이슈 동향 정책 브리핑 발행(분기별 또는 반기별)
- 'SDGs 기반 법안 심사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SDGs 예산 심의 체크리스트' 개발

3) 「기정인천SDGs 의정 포럼」 구성 및 운영

- 소관 위원회가 연 1~2회 정기적으로 주최하여 인천SDGs 이행 관련 정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협의의 공론장을 마련
- 또는 의원연구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집단들과 함께 포럼 공동 개최 추진 가능

4) 「기정지속가능발전 지방의회네트워크」 적극 참여

- 2025년 발족한 '지속가능발전 광역시·도의회 네트워크(사무국: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의원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전국적인 유엔SDGs 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SDGs 이행 입법, 예산, 감독, 대의 역할 가능

SDGs 이행과 지방자치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립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4.6.4(주) W&W,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소집



최종 보고서

인천 강화 갯벌

감사합니다.



SDGs 이행과 지방자치의 역할 인천시의회 중립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4.6.4(주) W&W,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소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시의회, 지속가능발전 조례 정비 제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인천시의회 중심의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

효·박차욱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사무처장 및 조수현 팀장, 인천시 정책기획관실 조운경 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연구 결과 발표를 맡은 윤경효 이사는 한국의 SDGs 이행 점수가 167개국 중 34위(78.1점)로 하락세에 있고 '인천SDGs 2026'은 유엔 세부 목표의 38.3%(59개)

만 반영해 정책 통합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표적 집단 인터뷰(FGI)와 제9대 인천시의원 40명의 공약 연계 분석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담 기구·인력·교육과정이 모두 부재한 제도적 공백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뒷받침할 입법 과제로는 △인천시의회 운영 조례 및 의사규칙 개정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취약계층 위원 구성 명시 및 의회 보고 의무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개정(책무성·대표성 강화) 등 3대 조례 정비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운영 방식, 시민참여 확대 방안, 단계별 실행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최종보고서는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의 중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라며 "연구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실제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의해 후속 과제를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정책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출된 입법 과제와 조직개편 제안을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에서 후속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은구 기자 pek7777@naver.com

일간경기

2026년 5월 7일 목요일 007면 지역

인천시의회, 핵심 실행 과제 제안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는 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인천시의회 중심의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의 중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실행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박차욱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사무처장 및 조수현 팀장, 인천시 정책기획관실 조운경 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김종환 기자

서울일보

2026-05-06 17:22

인천시의회, 특위 설치 및 조례 정비 방향 등 핵심 실행 과제 제안

(박은구)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는 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인천시의회 중심의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의 중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실행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박차욱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사무처장 및 조수현 팀장, 인천시 정책기획관실 조운경 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연구 결과 발표를 맡은 윤경효 이사는 한국의 SDGs 이행 점수가 167개국 중 34위(78.1점)로 하락세에 있고, '인천SDGs 2026'은 유엔 세부 목표의 38.3%(59개)

만 반영해 정책 통합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표적 집단 인터뷰(FGI)와 제9대 인천시의원 40명의 공약 연계 분석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담 기구·인력·교육과정이 모두 부재한 제도적 공백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뒷받침할 입법 과제로는 △인천시의회 운영 조례 및 의사규칙 개정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취약계층 위원 구성 명시 및 의회 보고 의무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개정(책무성·대표성 강화) 등 3대 조례 정비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운영 방식, 시민참여 확대 방안, 단계별 실행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최종보고서는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의 중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라며 "연구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실제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의해 후속 과제를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정책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출된 입법 과제와 조직개편 제안을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에서 후속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매일

2026-05-06 18:28

인천시의회, 특위 설치 및 조례 정비 방향 등 핵심 실행 과제 제안

(김종환)

유승분 대표의원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는 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인천시의회 중심의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의 중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실행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박차욱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사무처장 및 조수현 팀장, 인천시 정책기획관실 조운경 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연구 결과 발표를 맡은 윤경효 이사는 한국의 SDGs 이행 점수가 167개국 중 34위(78.1점)로 하락세에 있고, '인천SDGs 2026'은 유엔 세부 목표의 38.3%(59개)

만 반영해 정책 통합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표적 집단 인터뷰(FGI)와 제9대 인천시의원 40명의 공약 연계 분석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담 기구·인력·교육과정이 모두 부재한 제도적 공백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뒷받침할 입법 과제로는 △인천시의회 운영 조례 및 의사규칙 개정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취약계층 위원 구성 명시 및 의회 보고 의무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개정(책무성·대표성 강화) 등 3대 조례 정비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운영 방식, 시민참여 확대 방안, 단계별 실행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최종보고서는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의 중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라며 "연구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실제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의해 후속 과제를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정책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출된 입법 과제와 조직개편 제안을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에서 후속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IV 연구단체 활동 결과 · 성과

○ 연구회 연구결과 <총평>

- 본 연구는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 방안 연구 용역」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가 인천시의회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 체계와 의회 역할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이다. 연구용역은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가 수행하였으며, 2026년 5월 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 연구는 국내외 SDGs 동향과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SDGs 이행과 의회 역할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인천 SDGs 이행 현황, 표적집단인터뷰(FGI),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역량과 실행체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회가 입법·예산·감시·협치 기능을 통해 SDGs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결과, 인천SDGs 2026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행 가능한 유엔SDGs 세부목표 154개 중 59개만 반영하여 연계율이 38.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으로 통계적 해석이 가능한 41개 지표 중 양호 18개, 미흡 21개로 나타나 인천시의 SDGs 이행 수준도 절반 이하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안전망과 지역치안 관련 지표를 포함한 사회분야의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 아울러 인천시의회 내에는 조례안·예산안 심사, 행정감사, 정책질의 과정에서 SDGs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거나 영향분석을 수행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SDGs를 집행부의 정책과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의회가 입법·예산·감독 기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견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국제적으로는 유엔과 세계의회연맹(IPU)이 SDGs 이행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IPU의 하노이 선언, 핀란드 미래위원회, 독일 지속가능발전 의회 자문위원회, 프랑스 녹색예산 제도, 오스트리아 예산처의 SDGs 영향분석 등이 주요 참조사례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시의회가 전담기구, 영향분석, 예산 심사, 정보공개, 시민참여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되었다.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을 의정활동의 상시 기준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①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② SDG 영향분석의 조례안·예산안 심사 연계, ③ 관련 조례 및 의회 규정 정비, ④ 의원 및 의회사무처 역량 강화, ⑤ SDGs 이행 정보공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인천시의회가 SDGs를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 입법, 예산, 행정감사, 대외협력 등 의정활동 전반의 실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결과는 관련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설치 논의, SDG 영향 분석 도입, 집행부와의 정책협의,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 성과 <실적>

가. 입법활동 등(관련 조례 제정 등)

첫째, 「인천광역시의회 의사규칙」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단계에서 해당 안건이 SDGs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SDG 영향분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입법·예산 심사 과정에 지속가능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둘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상설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원회 간 연계가 가능한 위원회 운영체계를 검토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SDGs의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분야가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 전문위원과 사무지원 인력 배치가 필요하므로, 의회 사무기구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넷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농어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평가보고서의 의회 보고, 지속가능발전 전용 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이해관계 집단 참여형 숙의공론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협의회 위원 선정 과정의 개방성 · 투명성 · 포용성 · 대표성을 강화하고, 인천SDGs와 연계한 실천 사업 계획 및 이행보고서 공표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시민사회,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정책개발 등(제안 사항)

첫째, 인천시의회 내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별위원회는 SDGs 관련 의정활동을 총괄 · 조정하고, 조례안 · 예산안 · 행정감사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관점을 반영하는 중심기구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의회 기능별 SDGs 이행 역할 과제를 제안하였다. 입법 기능에서는 SDGs 기반 입법심사와 체크리스트 개발, 예산 기능에서는 SDGs 연계 예산 분석과 영향보고서 검토, 행정감독 기능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검토와 시정 질의 연계, 대외협력 기능에서는 국내외 의회 네트워크 참여 확대를 제시하였다.

셋째,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SDGs의 개념, 인천SDGs 이행 현황, 입법 · 예산 · 감사와의 연계 방식, 해외 의회 사례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회 구성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시의회 홈페이지 내 〈인천SDGs 의정활동〉 정보공개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조례안, 예산, 행정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17개 SDGs 목표와 연계해 공개하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해외 사례에 기반한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핀란드 미래위원회, 독일 지속가능발전 의회 자문위원회, 프랑스 녹색예산 제도, 오스트리아 예산처의 SDGs 영향분석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시의회 여건에 맞는 제도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연구회 활동을 통해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의회 차원의 논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SDGs를 집행부 계획의 평가 대상에 그치게 하지 않고, 의회의 입법·예산·감사·협치 기능과 연결된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다. 기대효과 및 활용 방향

본 연구에서 제시된 조례·규칙 개정 방향과 정책 제안은 향후 인천시의회의 후속 입법 논의와 의정활동 설계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SDG 영향분석 도입, 전담 전문위원 배치, 정보공개 체계 구축, 의원 역량강화 교육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제도화 가능성이 있다.

연구결과가 후속 입법과 의회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시의회는 SDGs를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하는 선도적 광역의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천시 집행부와는 정책협의,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타 광역의회와의 정책 교류, 의원연구단체 후속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